

“세계 인재가 찾아오는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

김대중 교육감 신년기자회견…주요 정책 방향 제시

“행정통합 단체장 뽑을 때 ‘통합교육감’ 선출에 찬성”

전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미래교육과 지역 공생교육, 국제교류 확대를 축으로 한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에 나선다.

김대중 교육감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미래교육과 지역 공생, 다양성이 풍미는 글로컬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다”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며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제 교육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전남이 첨단 AI·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흐름에 발맞춰, 교육 완성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교육 실천 공간인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 연계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컬 독서인문 교육을 통해 질문·토론 중심 수업을 확산한다.

또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 개별 학습 이력을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운영과 1대1 투터링을 통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을 교육 자신으로 활용해 ‘전남의(義) 교육’을 확산하고, (가칭)‘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교육부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올해는 전남이 첨단 AI·에너지 산업의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6 전남교육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도 강조했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

작하기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작은 박람회’와 글로컬 K-에듀센터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책 수립부터 예산, 인사, 행정 전반에 이르기 까지 공정과 투명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안

“시도민의 소망, 이제명 정부의 국가정책

에 맞고 전남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은 그동안 광주 교육과 공동학군제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며 “광주시교육청에도 통합을 준비하는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로 상당한 지역별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통합은 행정통합보다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달 말 열려던 출판 기념회 준비를 중단했으며 출마 선언도 당분간 유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무안공항 조류충돌 잦은 오전 최소인력 운영” 허점 지적

김문수 “55%가 오전 9시 이전…사고 당시 관리 1명 그쳐”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 후에는 일근자 1명

과 교대근무자 총 3명

명 중 2명 등 총 3명

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

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

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

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

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고속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

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

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

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

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

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

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접수

양부남,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력 강화 추진

생후 12개월부터 월 20만원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

서행정서비스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별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분

산·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가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

응·복구를 위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체계 구축 등 관련 핵심 사

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 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

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내용연

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의 교체 △정보시

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 △자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

축과 운영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 핵심 행정시스템

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시

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

고,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남도·시

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본 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이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금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게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경 기자 holbul@gwangnam.co.k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공포·시행

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구성방식은 판사회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판보에 ‘내란·외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처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

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란·반란

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

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

란 사건 관련 재판자는 공의신고자 보호

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연합뉴스

장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교육통합’ 논의 오늘 회동…이달 중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도 의견 교환

장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사진)이 ‘광주·전남 교육통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이 교육감은 6일 강 시장 측에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시·도교육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공식 만남을 요청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만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정책적 준비에 나서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이 교육감은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이달 셋째 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교육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앞서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광주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돼야 한

다”며 “광주시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 역시 이뤄야 할 과제인 만큼 하루라도 빨